

동북아시아의 한반도 공간구상과 균형발전전략

2005. 6

순서

1. 세계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향
2. 혁신주도형 균형발전전략의 추진
3.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
4. 수도권 발전대책
5. 개방형 다극 혁신 국토건설로 통일한국 토대 구축

국가균형발전위원회

1 세계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향

● 세계 및 동북아 질서의 재편과 한반도의 위협

- 세계는 지금 국경을 초월하는 **세계화**가 급속히 진전되는 한편, 경제 블록화와 민족주의의 대두 등 **분절화**가 동시에 진행
- 동북아는
 - 중국의 급부상을 견제하려는 **미국과 일본의 세계 전략**
 - 일본에 의한 **영토분쟁과 교과서 문제**
 - 북한 핵개발로 인한 **남북관계 교착상태** 지속 등**평화와 불안정**이라는 이율배반적 상황이 전개

● 우리의 선택 : 혁신주도형 균형발전을 통한 국력증진

-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우리의 **국부와 국력**을 증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지식·기술 중심의 **혁신주도형 균형발전 전략**이 필요
-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**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**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**혁신주도형 성장전략**으로 전환하여 개발년대부터 지속되어온 **요소투입형 성장**의 한계를 극복
- 지역의 비교우위를 살린 **특성화 발전**으로 전국토의 **성장 잠재력**을 극대화하고, 이를 통해 **국가경쟁력**을 제고

2 혁신주도형 균형발전전략의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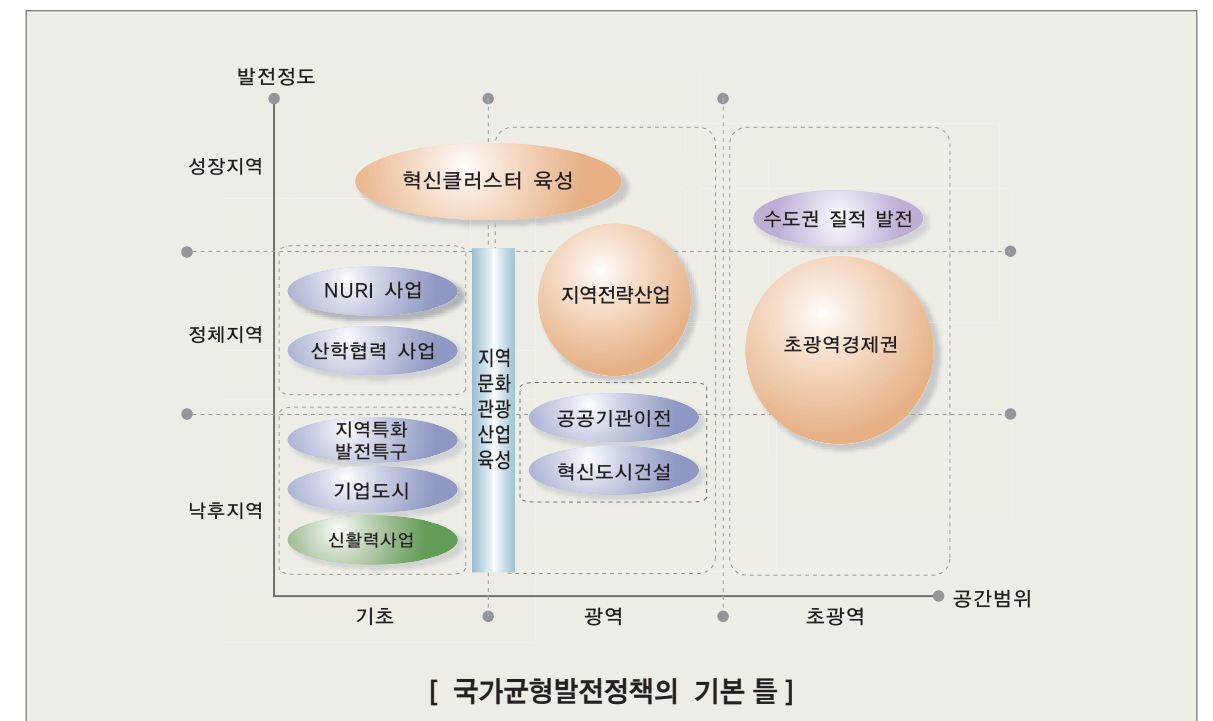
● 혁신주도형 발전전략

- 연구개발의 사업화, 기술거래·창업활성화, 산학협력 및 교육혁신, 지역인재 양성 등 추진

● 균형발전전략

- **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과 공동번영**이라는 큰 틀 속에서,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,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, 지역전략산업 및 혁신클러스터 육성, 신활력사업 추진, 수도권의 질적 발전 등 추진

● 공간범위(기초, 광역, 또는 초광역)와 지역발전정도(낙후지역, 정체지역, 성장지역)에 따라 특성에 맞게 추진



3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

● 수도권에 과다하게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역의 특화발전과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

- 수도권은 혁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**질적 발전**의 계기로 활용

●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 중에서 180개 내외 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 (‘국가균형발전특별법’에 의해 수도권 잔류기준에 해당하는 160여개 기관은 제외 : 인천국제공항공사 등)

-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·도의 발전정도를 감안하여 균형있게 배치
- **지역전략산업** 육성과 연계하여 산·학·연·관 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군을 집단이전

※ 프랑스는 53,000명, 영국은 47,000명, 스웨덴은 11,000명 규모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

● 혁신도시(지구)를 조성하여 공공기관, 대학, 기업 등이 상호 유기적 협력으로 혁신을 창출하고 지역특화발전을 선도

- 산학협력 관련기관 및 지원서비스 기능을 배치하고 다양한 협력프로그램 운영 지원
- 지방에 정착하여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양질의 주거·교육·문화·여가·정보기능·녹지·경관 등을 구비

※ 프랑스 소피아 앙띠폴리스와 미국 실리콘밸리의 혁신환경, 영국 밀턴 케인즈의 정주환경을 갖춘 도시(지구)로 개발

4 수도권 발전대책

● 지방과 상생발전하는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

- 기존의 양적 팽창에서 질적 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
- 입지규제 중심의 소극적 접근에서 벗어나 산업클러스터 육성 등 **적극적 수도권 발전**을 추진

● 2천만 시민의 생활터전으로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수도권으로 재창조

- 서울은 국제비즈니스·금융, IT·BT기능을 강화하여 도쿄, 상해 등과 경쟁하는 동북아 거점도시로 육성
- 인천은 물류·해양·관광중심의 동북아 관문도시 구현
- 경기도는 첨단·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육성

● 인구안정화를 전제로 수도권의 삶의 질을 세계수준으로 제고

- OECD 수준의 대기질 확보, 수질 1등급의 생활환경 구비
- 용산기지를 민족공원화하고, 한강 수변공간을 시민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

※ 뉴욕의 경쟁력과 시드니의 쾌적성을 결합

● 수도권 규제개혁의 범위·시기 등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,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지방화 추진속도와 연계

- 단기적으로는 공장총량제 등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선별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,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지자체가 참여하는 **계획관리체제**로 전환

